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曹 敏*

◁ 目 次 ▷

- | | |
|------------------|-----------------|
| I. 序 言 | III. 民族統一과 統一文化 |
| II. 統一文化의 概念과 性格 | IV. 統一文化와 共同體意識 |

I. 序 言

이 글은 민족통일을 위한 통일의지를 복돋우고 통일후 예상되는 새로운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시론적 접근이다. 여기서는 '統一文化'를 통일과정과 통일후의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두 단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전략변수로 설정했다. 民族共同體는 일단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상정한다.¹⁾

통일문제 또는 남북한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군사안보적 시각이나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1) 통일원, 「3단계 3기조 통일정책」(통일원 교육홍보국, 1993. 8), p. 32.

연구의 암묵적 전제는 북한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거나 우리측의 우위 확보의 방안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 연구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이념과 가치체계의 문제에서 북한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상대적 확신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적극적 사고 보다는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최선의 선택으로 인식되면서 국력배양과 우리 사회 내부의 통합논리가 강조되었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민족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따라 통일연구는 이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문학, 문화·예술계를 망라하는 모든 분야의 연구과제로 떠오르는 통일문제연구의 폭주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민중부문에서는 민주화운동의 한 형태로 또는 그것의 최종적 발전형태로 통일운동이 다양한 목소리를 띠고 전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야와 학생운동권을 포괄하는 민중부문의 통일운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통일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통합과정의 합리적 대안의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분단의식의 극복과 분단체제에 따른 금기영역을 타파하려는 노력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최근 민중부문의 통일논의가 이념적 퇴조와 세계사적 변화의 충격을 수습하면서 남북한관계의 현실적 변화를 토대로 통일논의의 창조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은 다시금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³⁾ 이런 점에서 이념적 차원에서 진보와 보수, 그리고 통일논의의 주체에 따른 당국과 비당국 혹은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서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큰 폭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통일역량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고 국민적

2) 양성철, “학문내적 통일논의의 총 점검 및 통일이론의 새정립” 「통일문제연구」 14집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1990), pp. 59-115.

3)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1992. 겨울);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종오, “분단과 통일을 다시 생각해보며,” 「창작과 비평」 (1993. 여름) 참조.

컨센서스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통일문제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접근은 먼저 ‘전부 아니면 전부’ 라는 零合式의 사고와 ‘이기고 지는’ 승부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고로 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⁴⁾ 이는 먼저 상대방체제에 대한 상호인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사회주의적 이념과 가치체계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아울러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II. 統一文化의 概念과 性格

1. 통일문화의 개념

통일문제 만큼 합리적 이성 못지않게 순수한 열정이 요망되는 경우도 드물다. 이는 차가운 머리와 함께 뜨거운 가슴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까닭으로 통일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불러 일으키면서 민족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합의형성의 바탕을 넓혀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문화의 창출은 통일과정의 바람직한 規範的 論議를 촉구하는 한편 統一意志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規範形成 그 자체라고도 하겠다. 통일문화는 이러한 규범형성을 전제로 민족공동체의 이념과 제도수립의 합의기반을 마련하여 통일후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통일문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남북한 관계에서 民族同質性을 확인·회복하여 分斷文化의 극복을 지향하는 가운데 民族和合의 방안으로 문화부문의 架橋역할을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문화라는 용어는 1985년 9월 남북한이 분단 이래 지속되어온 오랜

4) 이상우, “‘이기는 통일’에서 ‘함께 사는 통일’로,” 『통일문제연구』, 제2권 제4호, (통일원, 1990 겨울호) (나남, 『함께사는 통일』, 1993. 6, 재수록) 참조.

단절의 벽을 뚫고 처음으로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이 서울과 평양을 서로 방문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한때 남북한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문화예술을 비롯한 비정치적 분야에서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적이 있다. 그리하여 통일문화창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문학, 문화예술, 언론, 교육 등의 분야에 걸쳐 統一文化 指向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도 했다.⁵⁾

일반적으로 ‘문화’라는 개념 자체는 추상적이고 다의성을 내포하는 관념적인 것의 총체로 여겨지거나, 삶의 질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그런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통일문화’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혼동마저 일으킬 염려가 있다. 이처럼 통일문화는 개념의 모호성을 불식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행태주의 정치학에서 ‘政治文化’를 정의한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개념정립을 위한 이해를 높혀 보도록 하자. 행태주의 정치학자들은 인류학에서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모호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별히 문화의 수많은 의미 중에서 하나에만 즉, ‘사회대상에 대한 심리학적定向’에 개념을 한정시켰다. G. Almond와 S. Verba는 문화라는 용어를 “특수한 정치정향들 즉 정치체제와 그리고 그것들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체제에 있어서 자아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했다.⁶⁾ 그리고 L. Pye에 의하면 정치문화는 정치과정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고, 정치체제에 있어서 행위를 지배하는 기초적인 가정과 규칙을 제시하는 태도·신념·정서의 총체라고 하면서 정치문화는 한 국가의 정치적 이상과 작동 중인 규범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⁷⁾ 이와 같은 정치문화는 정치에 대한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차원들의 집합적

5) 당시 국토통일원 주최의 통일문화 심포지움으로; 「통일문화 지향과 문화예술」(1985. 11. 25),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1986. 6),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1986. 10) 등이 개최되었다.

6) Gabriel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rinceton Univ. Press, 1964), pp. 13-14.

7) Lucian Pye, “Political Cultu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12, p. 218.

형태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문화는 정치적 행동에 대한 心理的 定向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사회의 정치문화는 정치적 대상에 대하여 국민들 간에 인지적·감정적·평가적 정향들이 특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패턴으로서 조작적으로 정의된다.⁸⁾ 물론 이러한 정치문화 접근법이 통일문화의 이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특정 행동에 대한 심리적 정향을 이해하려는 접근방향에 어느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문화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화를 範疇化한 다음, 그것들을 類型化하는 점에 의미가 있는 비교문화론적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통일문화는 범주화나 유형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통일문화는 전혀 새로운 문화유형을 창조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문화론적 접근이나 비교문화론적 이해와는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다.

통일문화는 민족통일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존의 사고의 틀과 행위양식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사고의 틀과 행위양식을 선택, 창조하면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전제에서, 사회의 모든 분야의 개개인의 행위노선을 인도할 가치, 신념, 의미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데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통일문화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기대는 민족통일을 이룸으로써 비로서 성취될 수 있다는 강렬한 열정을 가지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의 과정에서 ‘사회적 동원’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⁹⁾ 그러므로 통일문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분단의식과 그로 인한 고정관념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통일지향적인 가치와 규범에 관여하는 퍼스낼리티의 변화와 창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문화는 무엇보다 민족통일에 대한 동태적이고 창조적인 분위기를 바

8) Almond와 Verba는 정치문화의 준거틀의 세 가지 형으로 認知的(cognitive), 感情的(affective), 評價的(evaluative) 政治定向(political orientation)으로 해석한다. *The Civic Culture*, p. 15.

9) Deutch, K. W., "Social Mobi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5(September, 1961)

탕으로 한, 에토스 *ethos* 로서 보다는 파토스 *pathos* 로서의 성격을 띠는 문화라는 점에 큰 특성이 있다. 이는 곧 분열 보다는 통합을, 갈등 보다는 화해를, 증오 보다는 恨을 풀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解冤相生을, 그리고 열린세계를 추구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열망으로 특징지워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통일문화는 두 측면의 성격을 지닌다. 하나는 통일에 대한 당위와 소망 등의 기대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통일과정상의 道具文化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하나는 통일후의 바람직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상징한 目的文化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통일문화는 일반문화론에 바탕한 학술, 예술, 종교 등의 개별문화의 종합적 혹은 통합적 성격과는 다르며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남북한 문화의 절충식 통합과정을 지향하는 ‘文化統合’의 모델과도 다른 별개의 의미이다.¹⁰⁾

문화를 통상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관습 또는 행위규범체계라 한다면, 통일문화는 일단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녀야 될 어떤 정신자세, 가치체계, 행동양식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統一文化의 개념은 統一을 志向하고 民族共同體를 熱望하는 價値體系와 行動樣式을 包括적으로 受容하는 文化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역사적 당위성의 시각에서 볼 때 이질화되고 양립된 문화를 민족사적 정통에 맞게 융화·통합하고 나아가 통일을 적극적으로 내다보는 문화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¹¹⁾ 이런 점에서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남북한 문화의 도덕성과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것과 아울러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통일문화의 창출이야말로 분단의식을 극복하고 통일에 접근하는 필수요건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통일문화는 통일지향적 가치정향으로서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두루 통용되는 가치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10) 21세기 위원회(권영민), “문화통합·통일충격을 줄이는 하나의 민족문화로,”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동아일보사 1993. 2)

11) 이병룡, 「통일문화 지향과 문화예술」(국토통일원, 1985. 11), p. 8.

2. 통일문화의 성격

통일문화는 전혀 새로운 文化規範이다. 이를 위해 통일문화는 다음과 같은 두 차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민적 의지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기능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모든 정책을—교육, 안보, 외교, 경제, 사회개발, 국민복지, 문화정책 등의 제반정책—통일지향적 방향으로 정립하는 정책지도이념의 기능이 기대된다고 보겠다.¹²⁾ 그러므로 통일문화의 창출은 곧 국가부문과 시민사회 영역의 공통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서 통일문화의 창출을 통해 미래에 대비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문화 창출의 실천적 성격은 어떠한 것일까? 통일문화의 지향으로는 통일문제를 분단현실의 틀 안에서만 한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의 미래에 비추어 분단구조 아래서 왜곡된 의식구조를 해방시키며, 한편으로는 민족의 통합과 민족문화의 창조라는 시각에서 분단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문화적·사상적 기반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지를 확산하고 통일문화의 창조적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대결과 갈등의식을 극복하고 실천적 통일문화 창조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문, 예술 특히 공연예술—음악, 미술, 영화, 연극, 무용 등— 및 문학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남북한 문화의 공통적 기반을 확인하는 작업과 동시에 우리문화 또는 민족문화의 象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는 우선 반세기 동안의 냉전논리를 극복하고 흑백논리와 선악논리를 타파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 요망된다.

부분은 전체의 구성요소가 되지만, 단순히 부분의 종합이 전체인 것은

12) 문홍주,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 (국토통일원, 통일문화심포지움; 1986. 10. 16-17)

아니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일단 문화부문에 한정해서 예를 든다면, 통일문화는 분단문화의 극복을 지향하는 다양한 문화 장르의 종합적이거나 최종적 취합이라기 보다는, 통일문화라는 규범적 가치체계가 모든 문화 부문에 선형적으로 관류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생활문화의 저변에 자리잡는 상태를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문화의 창출과 관련하여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일반적으로 사회 내의 계급분화와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에 따라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나누는 일반문화론적 이해와는 달리,¹³⁾ 통일문화 경우의 주체문제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문제라 하겠다. 우선 통일문화 형성의 주체로는 학문, 예술, 문학, 언론 분야의 광범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기대되며,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개인 및 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여기에다 문화·예술활동의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목적지향적인 통일문화 창출의 중심체를 추진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문화는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전제에서 정부의 일정한 역할도 요망된다. 그런데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역할배분의 문제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 역사에서 운동의 주체는 체제측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확산되어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까지 고양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평화운동'은 누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냐는 질문에 국가단위의 정치체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은 국민 개개인이 평화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¹⁴⁾ 이러한 사례연구의 결과는 평화운동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주도의 역할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통일문화와 관련하여

13) 강현두 편, 「대중문화론」(나남, 1987), pp. 17-21.

14) 최상용, "한국인의 의식에 나타난 정치적 평화," 「평화연구」(고려대 평화연구소, 1991년 창간호), 참조.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지금까지 대개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 관련정책들이 정부측에 의해 배타적으로 독점되어온 사례에 비취볼 때, 정부의 역할은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설정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및 육성방안의 모색과 활성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이미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제시의 차원에서 구체적 정책방향과 프로그램이 여러 논문들 속에서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이제 통일문화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자. 본고에서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수준에 한정되겠지만, 몇 가지 예비적인 가정을 검토함으로써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남북한 공통의 가치와 이념적 기반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함께 공유되는 부분과 상호 극복해야 할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는 통일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먼저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불협화음을 조율할 단계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현실적으로 접근가능한 문제영역이라는 점에서도 연구의 타당성이 강조된다.

15) 윤덕희·김도태 공저, “공동체 형성의 기본방향 및 동질성 증대방안,”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2. 12), pp. 124-156; 김병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1993).

Ⅲ. 民族統一과 統一文化

1. 민족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은 물론 두 동강난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잇는 일이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이 한반도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 치우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마음대로 달릴 수 있고, 태극기가 삼천리 강산에 드높히 휘날리고, 통일조국의 어린이들이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그리하여 모두가 단군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봄 가을엔 평양과 서울로 향하는 수학여행의 꿈으로 한껏 부풀게 되는 나날이다. 지금 이러한 통일조국의 모습은 환상이 아니다. 통일은 이제 우리에게 가능한 현실로서 바짝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통일의 완성이거나 최종적 형태가 아니다. 참된 통일은 소외당하고 그늘지고 외진 곳 없이 남북한 주민 전체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統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및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절적이고 대립적인 분단체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統一은 새로운 民族共同體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분단체제를 특징짓는 대립적 측면인 이념,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등을 통합하고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이질화된 문화적 지표와 생활방식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통일은 理念統合, 體制統合, 그리고 社會統合의 세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⁶⁾ 이념은 정치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해

16) 분단의 통합과 민족통일을 민족통합·국가통합·체제통합의 세 차원의 통합을 통해 민족공동체 내지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규정한 입장이 있다. 구종서, “한민족

나가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집약한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가치지향적 바람을 담고 있다. 남한은 개인을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며 사유재산권을 존중한다. 이에 비해 북한은 개인 보다 집단이 앞서는 사회이며 사회적 가치 배분의 평등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북한 사회주의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천명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¹⁷⁾ 이러한 남북한의 상반되는 이념체계를 통합하는 일은 결코 절충식이나 수렴방식으로 하나의 평균적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¹⁸⁾ 왜냐하면 남북한은 상호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상태에서 서로를 대화나 타협의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도대상인 '적'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을 지극히 혐오하면서 갈등과 불신만을 철저히 내면화시킨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국가가 구현할 민족공동체의 이념은 남북한 이념과 가치체계를 어떠한 여과과정을 거쳐 창조적으로 통합하느냐 하는 과제로 제기된다.

다음으로 체제통합의 경우가 있다. 이는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통합으로 말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치적 목표, 주권의 소재, 권력구조의 성격, 통치구조 등을 포괄하는 통합을 지칭한다. 통일의 마지막 형태는 사회통합에 의해 마무리된다. 그러나 사회통합은 보다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통합과정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이해가 요망되는 문제다. 사회통합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거쳐야 할 하나의 단계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단상태가 종식된 후 통일된 사회 내에서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¹⁹⁾

공동체 형성에 관한 이론구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연구」(통일원, 통일방안논문집 제2집, 1990. 12) p. 32.

17)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49조 (1972. 12. 28. 최고인민회의)

18) 이념통합의 방식으로는 대개 두 이념체계의 장점을 수렴하고 단점을 지양하는 논리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 (노태구,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이념적 모색," 「민족통일」(1992. 3,4월호)), '다원주의, 공공성, 공정성, (박광주, "민주공동체의 이념과 가치," 21세기위원회, 「민주공동체통의 이념, 과제, 발전방향(1)」, 1991. 11) 또는 개인능력 중시와 사회적 평등보장의 조화, 무계획적 무정부적 시장경제의 극복과 폐쇄적 계획경제의 탈피 등의 절충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대개 앞의 두 단계 즉, 이념통합과 체제통합의 형태에 주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비록 유일한 통치권과 단일한 정치제도와 이념으로 통합된다고 할지라도 민족구성원 내부의 차별성이 더욱 심화되고, 남북한간 지역갈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²⁰⁾ 이러한 경우에는 이념통합과 체제통합 그 자체마저 위태롭게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분열현상이 초래되어 통일조국의 현실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표류하고 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통일 문제는 정치체제와 국가기구를 하나로 만드는 물리적 통합 못지않게 차별성과 이질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의 당위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의 궁극적 형태인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다. 「남북합의서」에 천명된 바와 같이 통일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두 사회체제가 평화적 공존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사회통합(societal integration)의 과정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오히려 사회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2. 통일의지는 과연 실천적인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남북한에서 함께 불리우는 애창곡이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에 이르는 현재, 통일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노랫말처럼 평균적인 한국인이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대해 평소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정 또는 ‘통일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관건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

19) 21세기위원회(최협), “사회통합 더불어 사는 사회로 이념의 벽을 극복,”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동아일보사, 1993. 2), pp. 101-102.

20) 강명구, “통일한국의 지역격차 문제 - 공존의 지역정책을 위한 제언,” 「통일한국의 새로운 넘과 질서의 모색」,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한국정치학회, 1993) 참조.

러 일으킨다.

최근 민족통일연구원에서 금년 6월 5일 부터 17일 사이에 전국의 20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면접조사를 실시한 조사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연구보고서인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분석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새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여러 차원의 정책 항목 가운데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²¹⁾ 이러한 조사결과는 통일문제야말로 분단체제에서 모든 국민들의 최우선의 관심영역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는 것으로 통일문제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절박하고 긴요한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은 한낱 口頭禪에 그치고 마는 껍데기 誓言에 불과한가? 이렇게 된 사정에는 지금까지 통일문제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정부의 홍보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던 전례를 문제삼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정부당국의 의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에서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어내지 못한 사정에서도 기인한다.²²⁾ 어쨌든 권

21) 면접조사는 새정부 출범 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귀하는 현재 새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했다. 응답순위는 「물가안정」(30.9%), 「경제성장」(22.0%), 「부정부패 척결 및 사회기강 확립」(19.0%), 이외에 「지역감정해소」(5.9%), 「정치적 민주화」(5.8%), 다음으로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5.5%), 「환경오염문제」(2.7%), 「부동산 투기억제」(2.6%), 「교통문제 해소」(1.8%), 「과열입시문제 해결」(1.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응답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경제 및 생활안정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기강 확립의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정치적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이 상당히 주목된다. (북한연구실,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민족통일연구원, 1993. 7)

22)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이 정부당국의 노력과 의욕적인 홍보에 비해 거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는 항상 실망으로 끝나버리고 이러한 결과가 축적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나 통일문제는 점점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위주의 체제의 청산과 민주화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의 저변에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기의 위기의식과 결부하여 경제적 성장과 안정의 추구만이 최상의 덕목으로 부각되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겠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적 가치의 숭배와 향락성 소비문화는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여지를 뺏어버리고 최소한의 공동체의식마저 박탈하는 반사회적 문화세태를 상기할 필요도 있다. 이는 고도로 정치화되고 집단화된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와 전혀 매개고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통일냉소주의’와 통일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북한 주민의 ‘통일지상주의’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²³⁾

지금까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그것은 첫째, 통일문제가 모든 국민의 생활 속에서 최우선의 실천적 과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통일에의 열정 즉, 통일의지를 확산시켜야 하는 과제가 급선무로 떠오른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민족통일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완수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 형성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통일후의 사회적 통합도 역시 우리 사회 내부의 착종된 이념과 가치체계를 해소하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극복하며, 성장·생산성·효율성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을 포섭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

23)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평균적인 시민의 관심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타산적인 계산과 관련된 경우가 일반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대학가의 통일운동과 통일관련 집회에서 보여지는 ‘셀물현상’은 통일문제가 이미 다수 대학생의 관심으로 부터 크게 벗어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더우기 평균적 시민의 의식 속에서 민족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일반화된 집단적 좌절의식이 통일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기대로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짐작된다.(귀순자 임영선씨의 수기, 「월간조선」, 1993년 11월호, 참조) 북한의 ‘통일지상주의’는 물론 분단 이래 지금까지 남반부 해방의 기치를 체제유지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는 북한지배체제의 이념적 세태에 의해 북한주민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환상일 수도 있다.

가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통일후 가장 우려되는 ‘통일후유증’을 미리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려깊은 통찰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²⁴⁾ 여기서는 일단 이러한 민족통일과 공동체의식의 형성이라는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변수로 통일문화 창출의 당위성을 지적하는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자.

IV. 統一文化와 共同體意識

1. 이념의 장벽을 넘어

통일은 당장 이룩해야 한다는 열정 못지않게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채 반세기를 지내온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질서와 제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서로의 相容性의 정도를 점차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런

24) 周知하다시피 ‘통일후유증’은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이다. 통일후유증을 막는 길에 대한 前 서독수상 Helmut Schmidt 의 충고,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특별강연 1993. 5. 20; 중앙일보, 5. 25, 26일자)는 경청할 만하다. 독일통일은 흡수통일이다. 통독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를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통일후유증은 대개 경제적 부담문제와 사회적 분열이라는 문제와 연계되어 인식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문제를 우선적 고려대상으로 삼는 입장에서는 ‘통일비용’과 ‘통일기회’라는 선택적 과제에 초점을 모으면서 후자 즉, 통일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흡수통일을 긍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는; 신동원(전 독일주재대사), “흡수통일 반대론에 이의있다,” 「월간조선」(1993. 11월호); 염돈재(전 독일주재공사),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신동아」(1993. 10월호) 등 참조.

이와 달리 사회적 분열을 통일후유증의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흡수통일이 현실화될 상황을 우려하여 통일과정의 템포를 적절히 조절할 것을 호소하면서 상호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상적인 모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흡수통일 반대론으로는; Holger Heider, “민족적 통일과 사회적 분열,” 「창작과 비평」(1993. 봄); 이해영, “통합 2년, 독일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비평」(1993. 봄) 등 참조.

점에서 규범적이고 가치내재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 성찰이 필요한 단계라고 여겨진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내세운 민주기지론이 남쪽의 반응을 얻지 못했듯이 최근 남한 중심의 자유주의체제의 통일의 주장도 스스로 이념적 변용을 기해야만 보다 큰 수용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의 도덕적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체제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전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개방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는 두 말할 나위없이 시장경제다. 시장경제는 共同體意識 *communitarianism*에 입각한 사회관계를 파괴한다. 그 대신 기능적, 도구적 인간관을 정치사회의 합리성으로 간주한다.²⁵⁾ 그에 따라 ‘시장의 실패’ 즉, 사회 경제적 지위와 부를 획득하지 못하면 능력부족 또는 ‘인간의 실패’로 규정되고 만다. 자유주의가 허구화되고 형식화되면 개인주의로 전락하듯이 시장논리는 무자비한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인해 정치사회적 폐단과 부작용도 적지않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부터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바람직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발전적인 가치체계에 대한 창조적 논의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서도 안될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히 고려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²⁶⁾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남북한이 공동체의식을 가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共同體란 하나의 가치체계 속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의 확인을 통해 성립될 수 있

25) R. Dahl, "Why Free Markets Are Not Enough," *Journal of Democracy* 3 (July 1992), pp. 82-89 참조.

26)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념적 모색은 최근 학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정치학계는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을 주제로 한국정치세계학회(제3회, 1993)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념문제와 관련하여 탈시장적 인간형의 모색을 시도한 논문으로 강정인, "2000년대 한국의 바람직한 정치적 인간상," 구범모 편저,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통일한국의 미래구상을 이념통합의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으로 안청시, "21세기 한국의 정치이념과 체제," 「21세기 한국의 정치와 외교-제3차 미래정책 공개토론회-」(21세기 위원회, 1992. 9) 등 참조.

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共通文化에 근거할 수도 있고, 합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느 경우나 공동체의식은 ‘우리는 하나’ 라는 뿌리의식에 바탕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동질성은 이념과 체제의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한을 통하여 생활저변에 흐르는 의식구조, 생활관습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문화유산 속에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2. 화해와 화합의 길목에서

사회주의의 붕괴는 자유주의와 서구의 합리적 가치관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는데 기여했다. 사회주의는 교만으로 자멸했다. 자기 모순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다. 사회체제를 왜곡하면서 밖으로는 정당성을 선전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주장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했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사회주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패배와 자본주의의 승리가 분명 우리 민족의 승리로 될 수는 없다.

민족통일은 한민족 모두의 승리이자 한바탕 축제여야 한다. 상호존중과 이질감 해소를 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 경우 이념과 체제의 존중은 한갓 수사학적 레토릭에 불과할 것이다.

통일문화 창출의 궁극적 지향은 남북한 和解와 和合에 있다. 화해와 화합의 기본전제는 우리 내부의 我執과 독선을 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내일을 내다보아야 한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하고 변화를 독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합창이 그릇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성체제’의 불가피성을 아무리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폐증은 아무런 비전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고정관념은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변화는 남한사회의 변화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문제다.²⁷⁾

27) 김문환, “남북한 상황변화 예측과 문화적 대응— 사회주의권 문화예술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4권 4호 (통일원, 1992. 겨울)

북한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은 이제 멸시와 안타까움으로 변했다. 역사적 추세에 역행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은 아직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과멸 단계에 이른 경제적 낙후성과 가난은 남한의 부담과 기회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민족문제를 지금까지 게임논리로, 군사작전 논리로, 정략적 차원에서, 더우기 시장확보 논리에서 파악해온 시각을 극복할 단계라고 여겨진다.

남북한 사이에는 이미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천명했다.²⁸⁾ 이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교류·협력을 위한 많은 노력과 솔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²⁹⁾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무성의와 불성실을 상대방 책임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폐쇄적 자급자족체제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런 점에서 더 이상 체제대결과 경쟁상대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화해와 화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화해와 화합은 무엇보다 냉전적 사고를 타파하고, 이념적 진통을 극복하고, 나아가 상대방의 가치체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부터 시작된다. 이는 먼저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바로 이 점에서 통일문화 창출의 기본전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증오와 독선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를 안으로 돌아보는 內向的 省察 *Introspective Reflection* 이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북한은 특정 인격체에 매몰된 偶像崇拜 *Cultism* 사회이다. 이 점은 변호의 대상이 못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어느 면에서 물욕에 매몰된 物神崇拜 *Fetishism* 사회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바람직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내향적 성찰이 요망된다는 하겠다. 이런 점에서 교육, 언론, 학술, 문

28)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29) 교류·협력은 기능주의적 논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개방사회로 유도하면 자유시장체제의 비교우위성이 전파되어 마침내 우리쪽으로 동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학, 예술 등을 망라한 모든 부문에서 화해와 화합에 기초를 둔 통일문화 창출에 이바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대개 분단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반통일적 논리로 일관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과 방송매체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이를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논지의 틀은 시기적으로 세 단계로 변해 왔다. 첫 단계는 사회주의 진영을 절대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냉전시대의 논리틀이 있었다면, 둘째 단계로는 공존의 논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존의 논리를 강조하면서도 그 밑바탕에는 항상 불신과 음모이론이 깔려 있었다. 셋째 단계로는, 최근의 논리틀로서 사회주의체제와 갈등적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전제한다.³⁰⁾ 이른바 兩非論의 시각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식틀만은 아직도 두번째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라고 보여진다.³¹⁾ 여기에다 매스미디어의 흥행논리에 의해 분단의 비극을 일상적 생활에 충격을 가하는 호재로 삼는 상업적 발상도 무수히 경험했다.³²⁾

30) 임상원, “북방외교와 보도,” 「1989년도 언론연수 강의록」(한국언론연구원) 참조.

31) 이창현, “방송매체의 반공이데올로기”(「저널리즘」, 1989, 가을 겨울호) 및 “한국언론의 통일 및 북한보도 분석”(「저널리즘」, 1990, 봄 여름호); 김기태, “통일관련 기사의 보도경향과 과제”(「저널리즘」, 1989, 봄 여름호); 김원태, “남북총리회담 보도 분석 연구”(「대중문화의 이해」, 일진사, 1991. 8); 유승익,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우리의 통일 및 북한관”(「남북관계의 새로운 인식」, 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1993. 4) 등 참조.

32) 1984년 6월에 시작한 KBS의 이산가족찾기 방송은 분단의 비극을 소재로 삼아 극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겠다. 한여름 동안 4천만을 뚫고 올린 이 ‘드라마’는 그야말로 ‘비극적 笑劇’ tragic farce 이었다. 이 ‘드라마’는 분단구조 자체가 얼마나 상품성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하나의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물론 한국인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지만—. 월남한 이산가족문제의 실체는 사실 분단체제의 모순을 반영하는 왜곡된 사회적 관계다. 월남후 재혼한 남녀의 경우, 현격한 사회경제적 차이를 확인하는 순간 기대와 실망 속에서 돌아서버린 경우—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월남인의 경우 이산가족을 찾는 문제는 KBS의 이산가족찾기운동이 없더라도 충분히 서로의 존재와 사회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의의 문제에 불과하다—등은 모두 순간의 감동과 동시에 영원한 망각지대로 묻히고 말았다.

이 ‘드라마’는 분단모순에 대한 정치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되지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체제에서 권력구조의 제4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힘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³³⁾ 이 점에서 언론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들은 통일문화 창출의 과정에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언론과 방송매체의 경우에만 이러한 인식들에 간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내향적 성찰이 기대되는 단계라고 생각된다.

통일의 철학이 '희망, 화해 그리고 창조'이어야 한다고 말한다³⁴⁾ 남북은 서로 이질성을 긍정하고 개방적인 의식개혁의 틀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 이 사회계약을 위한 전제로 우리는 '적색공포'의 가위눌린 심리상태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³⁵⁾

통일문화 창출을 위한 첫걸음은 적대감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한 핏줄 같은 동포에 대한 증오와 맹목적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민족운동의 과제를 둘러싸고 좌·우파간의 이념적 편차를 노정했던 한국현대사에 대하여 한층 성숙된 이해를 시도하는 작업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³⁶⁾ 이러한 분위기를 서로서로 북돋우면서

못한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분단의 비극에 편승한 방송매체의 속성을 살필 수 있다.

33) 지난 삼십년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4개의 엘리트 그룹으로는 정치군인을 중심으로 한 군부, 경제인그룹, 정치인그룹과 네번째로는 학생집단이 있었다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학생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면서 이 자리를 언론이 차지하게 되었다. 한완상, 「관훈클럽 토론회 질의 답변 내용」(93. 10. 26) 참조.

34) 한국철학자 연합대회 대회보, “변화하는 시대와 철학의 과제”(제4회, 1991. 8) 참조.

35) 이장호,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 통일과 심리적 화합」(한국심리학회,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1993. 6) 참조.

36) 화해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오는 '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상당수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독립유공자의 반열에 포함하여 서훈할 것을 발표했다.(동아일보, 1993. 8. 15, 보도기사); 猶夷민족회는 독립운동가 달력을 제작하면서 좌우익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48년 월북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若山 金元鳳을 포함시켰다.(한국일보, 1993. 11. 21, 보도기사). 민족주의 좌파의 복귀는 '열린 의식'을 보여주는 발전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교육, 학문, 예술, 언론, 문학 등의 모든 부문에서 한걸음씩 화해와 화합의 광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글의 에필로그로 여기서는 민족의 화합을 위해,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심성인 ‘함께 아파하기’에 기대쓴 작가 이청준의 신작 『흰 옷』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자.³⁷⁾

이 작품에서 작가는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좌우로 갈려 피흘려야 했던 이들의 해원과 화해를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민족의 대화해를 호소하고 있다. 80년대 진보적 이념과 수정주의적 역사관의 세례를 받은 아들은 산사람(빨치산, 야산대)으로 최후를 마친 해방공간의 젊은 선생들의 ‘주체적 민족주의, 그 자주적 사회주의의 숭고한 이념’을 기리면서 그들의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다. 반면 당시를 경험한 아버지는 ‘그 투철한 혁명성, 붉은 사상성 보다도 앞서는 인간적인 불안감과 나약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우리에게 그 때의 일들을 역사적, 도덕적 정통성의 잣대로 재단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함께 아파하기’라는 것을 절절히 호소한다.

“더러는 좌우로 서로 길을 달리하면서도 마음 속 소망만은 저들의 내일을 위해, 저들의 밝은 꿈과 소망이 꽃필 이 땅, 이 땅 사람들의 밝은 삶을 위한 사랑으로 뜨거웠거늘… 이념과 사상의 사슬, 대립과 미움과 원한과 복수의 사슬, 거짓과 속임수와 미망의 사슬들을… 누구보다도 저 아이들에게서 그걸 끊어 풀어줘야제. 오늘 다시 저 아이들을 묶는 사슬을 만들지 말아야제.”³⁸⁾

우리는 그동안 참혹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분단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망국적인 가난을 굴레를 떨쳐버리려고 국가건설과 경제성장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왜 서로 찢겨야 했으며, 왜 서로 저주해야 했는가를 차분히 반추해볼 겨를이 없었다. 이제 겨

37) 작가 이청준은 이 작품을恨의 정서로 민족화합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고 술회한다. 한겨레신문, 1993. 11. 7; 중앙일보, 1993. 11. 13, 대담 참조.

38) 이청준, 『흰 옷』 「문예중앙, 1993. 겨울호」

우 숨돌릴 만한 여유를 갖게되자마자 민족통일문제는 급격한 상황변화 속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성장과 발전논리의 신화 속에서 이제 북녘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족통일이 참된 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체제통합을 넘어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고, 동포애가 발휘되고 동일한 민족문화를 향유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통일문화는 통일과정과 통일후에 두루 적용되는 문화규범으로, 이는 분열을 넘어 통합을, 갈등을 넘어 화해와 화합을, 증오를 넘어 解冤相生하는 길을 모색하는 창조적 과토스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